

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,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2.26.(목) 매일노동뉴스, “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‘1년반 뒤 전면 자유화’ 노동부 제안” 기사 관련

○ 정부가 고용허가제(E-9)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요건을 현행 ‘3년간 3회’에서 ‘1년 6개월 뒤 완전 자유화’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TF」를 구성하여 노·사,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임
 - TF 워크숍(2.24.~2.25.)에서도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논의하였으며, 정부에서 특정한 방안을 제안한 것은 아님
-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,
 -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현 (044-202-7145)